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2019년

정 부 혁 신  
종합 추진계획

2019. 2.



“

2019년,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

2019년

---

정 부 혁 신  
종합 추진계획

---

2019. 2.



## 목 차

---

I. 추진 방향	07
II. 추진 과제	10
전략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15
전략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29
전략 3.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41
III.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51
IV. 추진방법 및 성과관리	55
V. 추진체계	58
(붙임1) 2019년 정부혁신 세부사업 및 주관 부처	61
(붙임2) 지방자치단체 '19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65

## 추진경과

###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18.3.19.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별·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 중앙부처('18.5.), 공공기관('18.7.), 지자체·교육기관('18.8. 민선7기 반영)

### ■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18.7.19.)하여 '정부혁신국민포럼'('18.9.)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18.10.) 출범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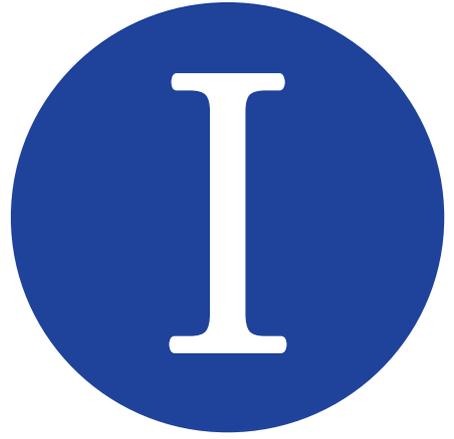
### ■ '18년도 추진성과 점검 및 '19년도 신규과제 발굴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18.10~12., 총 2회), 정부혁신 열린토론회\* ('18.12., 총 3회) 개최를 통한 '18년도 추진성과 논의 및 신규과제 발굴  
\* 신규·현장접점, 우수사례담당자 등 중앙부처·지자체 5급 이하 실무자(120여명) 참석
- 정부혁신 국민여론조사 및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18.11~12.)
- 신규 역점과제(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18.12.~'19.1.4.) 및 핵심과제 추진방안 관련 유관부처 회의 개최('19.1.8.)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 ■ '19년도 정부혁신 추진방향 확정 및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19.1.10.)를 통해 '19년 중점 추진방향 및 6대 역점과제 확정
- 부처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19.1.11~25.)

### ■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19.2.)



추진 방향

## ■ 2018년 성과 및 반성

- (성과)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 기반 마련

※ OECD 정부 신뢰도 순위 : ('17) 32위 → ('18) 25위 (7단계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17) 51위 → ('18) 45위 (6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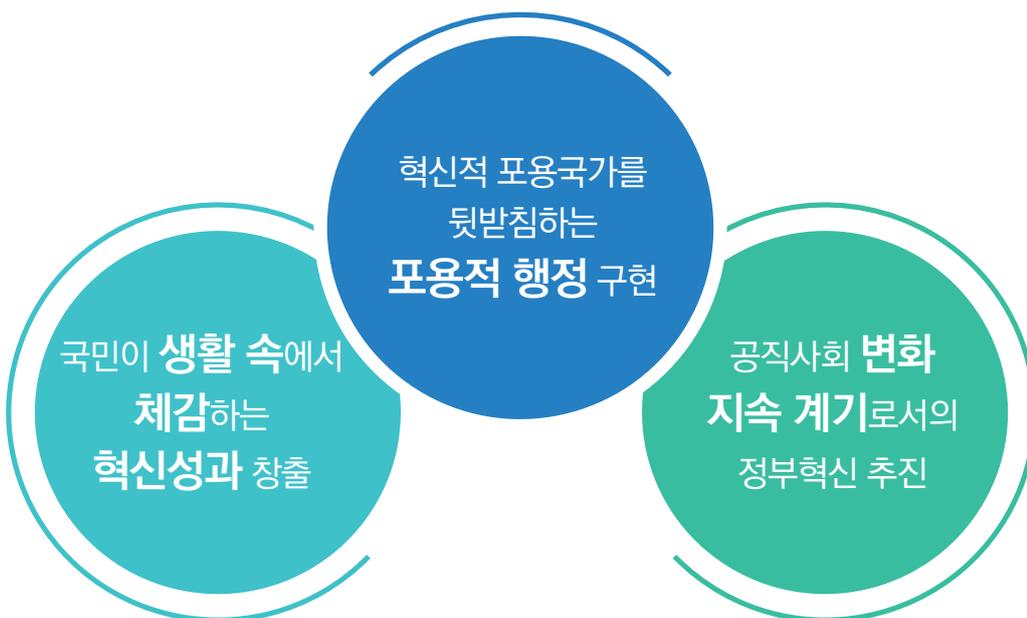
- (사회적 가치) 정부 운영 및 정책기준을 효율과 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참여와 협력) 예산·법령·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기관 간 정책조정 활성화 등 협업 촉진 기반 마련
- (신뢰받는 정부) 공직 부패·비리·성폭력 처벌 강화,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 국민 체감 행정혁신 노력

- (보완할 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18.3.) 및 기관별 계획 수립('18.5~8.)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정부혁신 성과창출이 미흡함

## ■ 2019년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 상의 비전·목표, 전략은 유지

-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역점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
- 기존 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

## ■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 ■ 2019년 역점 분야

### ●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 공공구매조달(연123조원 규모)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

###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인사) 현장감수성·공감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학습 등 강화, 순환보직제 개선 및 전문직공무원 확대 등 공직 전문성 제고
- (감사)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 등 적극행정 독려
- (조직)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긴급대응반)이나 도전적 과제(벤처형조직)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유연하게 대응
- (예산) 예산과정에 참여 강화, 업무추진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 선정·공개

### ●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사전알림, 생애주기서비스 등 국민이 찾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개선
-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 확산
-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의 참여(리빙랩 등) 확대

### ●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 기관 간 기능연계 분석 및 협업 표준 프로세스 마련, 협업 인센티브 강화
- 분산적 공공서비스 집행기관(각종 ‘센터’)들의 한 곳 통합 또는 시설 공유

### ●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데이터행정) 국민 안전 데이터를 집중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민참여 확대에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 (데이터경제)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등 혁신성장 뒷받침



추진 과제

## < 2019년 정부혁신 체계도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목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22)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19년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 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 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 정부혁신

'19년  
역점 분야

-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 (19년 역점과제 ★)

<p><b>전략 1.</b>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p>	<p><b>0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투자 확대</li> <li>②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li> </ul>
	<p><b>02.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li> <li>②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li> <li>③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추진</li> </ul>
	<p><b>03.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정부혁신추진협의회</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li> <li>②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li> </ul>
<p><b>전략 2.</b> 참여와 협력</p>	<p><b>04.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예산·조직·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li> <li>②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li> </ul>
	<p><b>05.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정부혁신추진협의회</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li> <li>②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li> <li>③ 공공시설 개방 확대</li> </ul>
	<p><b>06.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현장토론회</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범정부 협업 촉진 ★</li> <li>②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li> </ul>
<p><b>전략 3.</b> 신뢰받는 정부</p>	<p><b>07.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li> <li>②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li> </ul>
	<p><b>08.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li> <li>②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li> </ul>
	<p><b>09.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li> <li>②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li> </ul>

## 〈 정부혁신과 포용국가와의 관계 〉

### 정부혁신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함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혁신성장



가계소득과  
사회안전망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

공공서비스 재설계

국민 참여 · 협력

## 〈 사회적 가치란? 〉

### ■ 개념 및 체계

-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 세부 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전략 1.

—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과제1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 그간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전환하여,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점 반영하도록 재정혁신하고,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 1-1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 ■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

- 일자리, 안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분야 예산 대폭 확대
  - ※ '19년 주요분야 예산규모(전년 대비) : 일자리 22.9조원(3.7조원 ↑), 안전 15.9조원(0.7조원 ↑), 보건 12.1조원(1조원 ↑) 등
  -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직업훈련 내실화 및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계정(보증규모 5,000억원) 신설·운영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확산

### 주요사업(예시)

- 마을관리\*, 신품종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기재부)
  - \* 도시재생 지역 중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관리(<sup>(19)</sup>10개 → <sup>(22)</sup>100개)
  - \*\* 지역별 신품종 재배단지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sup>(19)</sup>2개 → <sup>(22)</sup>8개)
- 청년 사회적기업가\*, 청년 협동조합\*\*,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기재부)
  - \* <sup>(18)</sup>675팀 → <sup>(19)</sup>800팀, \*\* <sup>(18)</sup>30팀 → <sup>(19)</sup>60팀, \*\*\*인건비 등 지원(<sup>(18)</sup>4천명 → <sup>(19)</sup>9천명)
- 사회적 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기부)
  - ※ 총액 대출 목표 상향(<sup>(18)</sup>150억원 → <sup>(19)</sup>500억원), 정책 우대금리 부여(△0.1%, 소자금)
-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기정통부)
  - \* 우수 사업모델 발굴, 인큐베이팅, 활동자금 지원, 일거리 매칭 등(<sup>(18)</sup>316개 → <sup>(22)</sup>400개)
- 마을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자립 생존율 제고를 위한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설치(행안부)
  - ※ 마을기업 <sup>(18)</sup>1,514개소 → <sup>(19)</sup>1,614개소,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sup>(18)</sup>2개소 → <sup>(19)</sup>5개소
-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농식품부)
  -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sup>(18)</sup>9개소 → <sup>(19)</sup>18개소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원(<sup>(18)</sup>10억원 → <sup>(19)</sup>39억원)(문체부)

---

## ■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적 가치 요소 반영

-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마련 및 도입

※ 예타평가 항목 : (現)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  
→ (改) + 사회적 가치 평가

-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점(최대 5% 이내) 부여

※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평가항목 신설('18.12.)

-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보조사업의 타당성'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여 가점(최대 3점) 부여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에 평가항목 신설('18.12.)

## ■ 공모사업 선정·배분 시 사회적 가치 사업 중점 지원

- 정책자금 배분, 공모사업 선정 등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요소 도입 및 중점 지원

※ (사례) LH는 신규 주택사업 투자결정 시 기존 경제적 사업성 지표 외 사회적 가치, 주거복지 기여도와 같은 공공성 지표 추가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사업(예시)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기관명)	지원규모 및 대상
•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바우처 제공<교육부>	5,000명, 연간 최대 35만원
• 취약계층 따뜻한 에너지복지 확대<산업부>	하절기 바우처 신규 도입(폭염 대응)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소방청> ※ 외교부 협업	전화·인터넷·이메일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 상담
• 산·학·연 연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과기정통부>	103.5억, 414개 과제
• 스마일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등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법무부·여가부·복지부>	(‘18)675억 → (‘19)735억
•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련, 일정 거리 이내(1km) 가해자 피해자 접근 시 경보 발생, 접촉 사전차단<법무부>	(현행)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 → (개선) 장소 무관, 피해자 1km 이내 접근 시 경보
• 군 장병 국선번호사 지원 서비스<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번호사 지원
•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축<농식품부> ※ (30분)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문화·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응급벨, 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	중심거점: (‘19)11 → (‘22)100개소 기초생활거점: (‘19)108 → (‘22)500개소 마을조성: (‘19)438 → (‘22)1,000개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농식품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영농정착지원금 201억 등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근로지원인 지원 <인사처>	(‘18) 5억 → (‘19) 7억8천9백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농식품부>	(‘19) 돌봄교실(24만명) → (‘20) 초등 1·3학년(137만명) → (‘22) 초등 전학년(268만명)
•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생활불편 해소<산업부>	배변지원, 반러봇 등 보급 (‘18)350대 → (‘19)800대
•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고용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 (1회당 10만원, 22,500개소)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확대<고용부>	(‘18)2,500명 → (‘19)5,000명 참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고용부>	8만 명, 1,582억
• 쇠퇴해가는 어촌 공동체를 되살리는 「어촌뉴딜 300」<해수부>	혁신어촌 70개소 조성 총 사업비 1,729억
• 동네의원(의원급) 위탁병원 확대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보훈처>	보훈대상자
•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 928억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DW 구축 : 42억 등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췌

### ■ 혁신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 혁신제품 구매 시 성실수행 인정 및 적극행정 면책 확대 추진
- 실증 완료된 연구개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우선구매 지원
- 공공조달수요의 혁신성 평가지표\* 개발 및 혁신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제품의 수의계약·우선구매 등에 활용
  - \* 기술성, 시장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신산업분야 수요확보, 미래성장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시범구매 활성화

### ■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고사양 제품의 기술 개발 및 구매를 위한 경쟁적 대화방식\* 활성화 기반 마련
  - \* 입찰참여 업체들과 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세부 규격을 확정된 후, 최적의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조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군 발굴 및 수요기반 R&D를 통한 혁신제품 개발 지원\*
  - \* 혁신제품 개발기업 대상 제품개발 및 안정적 공공조달 공급을 위한 핵심특허 확보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도입 및 현장검증(테스트) 지원
  - \*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단계 시제품을 시범구매·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 지원

## ■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조달시장의 수요·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통합창구인 쌍방향 오픈마켓\* 방식의 ‘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 \* (예시) 공공수요 기반 혁신적 기술 및 상품 요구(혁신기술 발굴), 다양한 혁신상품을 업체가 역제안(혁신기술 제안), 빅데이터, AI 활용 통합검색 및 거래 지원(수요공급 매칭)
- 부처 협업 체계를 통해 장·단기 공공 연구개발 및 조달 수요를 통합 조사·공개하는 원스톱 수요정보제공 기반 마련

###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사례

- (해외 사례) 1958년 미 국방성의 조달 담당자는 미소 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반도체 사양을 제시. 이에 무명의 페어차일드사가 조달계약 후 6개월 간의 기술축적을 통해 혁신제품을 조달하였고, 이는 실리콘밸리의 탄생으로 이어짐
- (국내 사례) 국립공원공단은 ‘순찰용 드론’ 구매 시, 국내에서 바로 조달되기 어려웠던 ‘정지비행·안내방송’ 등의 향상된 기술 사양을 제시하였고, 기업은 맞춤형 R&D를 통해 국산 드론을 조달 → 기업은 기술혁신, 공단은 해안 국립공원 관리능력 강화

## 과제2 :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 효율성 위주의 인사·조직 운영 및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 관점에서 따뜻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편

### 2-1

###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역점

#### ■ 현장감수성·공감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像 정립

- 공무원의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확대
  - 정책현장 중심 토론형 교육기법을 각 교육훈련기관 기본·장기교육에 도입
  - 군·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현장 중심 교육 확대
- 기관차원에서 실시하는 재난 현장 봉사활동, 민생지원·국민소통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확대 추진
- 고위험·고강도 임무 또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민생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추진
  - \* 특정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민원담당자 등
  -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 등 정신재해 예방 기능 강화 및 심리재해 취약계층 심리상담 집중 지원
    - ※ 청사 외부 근무자를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도입, 특정직·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현장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관별 근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 (예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업무용 PDA 활용, 이동매체 복무 확인 서비스 제공(1일 1만여 명)
  - ※ 출·퇴근, 초과근무, 출장 등에서 내실 있는 근태관리를 위한 근무상황 점검방안 동시 마련 필요

#### ■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 양성

-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 부처(분야)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정비
- 개방 적합성이 높은 직위\*로 전면 재조정, 민간 우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개방형 직위 제도 효과성 제고
  - \* (예시)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 공직 내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대국민 소통·홍보 분야, 민간 인재풀 풍부 분야 등

- 전문분야 세분화 및 민간 전문성 발휘가능한 채용 확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부헤드헌팅 기능 활성화\*\* 등 전문 인재 발굴·확보

\* 4차 산업 등 미래수요에 맞춰 직렬·직류 신설 및 채용 세분화, 경제 적합 전문 직무 분석·발굴 등  
\*\* 직무요건 분석, 시장조사, 후보자군 구성 및 공직지원 유도 등

## ■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18.12. 감사원)
-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내재화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체계적인 학습 및 공직사회 내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이러닝\*\* 제작 추진  
\* ('18) 인재개발계획 시책 교육 → ('19) 의무 이수과정으로 상향  
\*\* 관계부처 합동 「(가칭)적극행정의 이해(안)」 이러닝 개발 추진
-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 추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9)
-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보상체계 확립

- 성과계약 시 조직 계획(임무 및 전략목표)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을 각 기관 개인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반영  
※ 관리자 핵심 성과목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반드시 포함(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8.7.)

### 2-2

##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역점

## ■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 시범운영

-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절차·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해 즉각 설치하는 과장급 임시조직
- 임무, 조직운영 관련사항 등 대응반 운영계획은 「부처 훈령」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 표준훈령(안) 마련 / 설치·운영 6개월 이후 자동폐지(6개월 일몰제)
- 복수차관 부처 등(8개)에 우선 실시하고, 성과확인 후 확대 추진

## ■ 「벤처형 조직」 운영 확대

- 미래수요,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나 목표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 설치

※ '혁신성, 도전성, 신기술 활용' 등의 성격을 정부 수행기능으로 구체화하여 각 부처에서 적극 활용토록 제도화

구분(예시)	주요내용
생활현장 개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
제도혁신	기존 행정이 지닌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과제
미래형 과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혁신	사회적 가치, 국민참여, 정부-민간간 협업 등 정부혁신을 담은 과제

- 기존 조직과 비교해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면에서 탄력성 부여

※ 아이디어 제안자 팀장 수행(팀원선발), 탄력복무, 성과 등 우대, 특성에 따라 장차관 또는 소속 기관장 직속 설치, 직책급부여, 권한위임 등

## ■ 문제해결형 임시조직 활성화

- 정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위기에측·대비 등 임시조직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강화

### (사례) 해양수산부 ‘조인트벤처 1호’

※ 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민간기업의 사내벤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임시조직의 형태로 2달 간 임무를 부여하여,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접목한 획기적인 ‘Ocean Drone 555 전략’ 마련

※ (특징)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한 직원 선발, 이전 업무 완전배제, 참여직원 장기휴가·참여자 제공부서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독립된 외부사무실 사용 등

## 2-3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 ■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

-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등 유리천장 허파
  -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 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고위직 임용 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참여율 확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2022년 달성 목표〉

부 문		'12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실적	'22년 목표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단	4.2%	( <sup>17.12.</sup> )6.5%	( <sup>18.12.</sup> )6.9%	10.0%
		본부 과장급 (4급 이상)	9.3%	( <sup>17.12.</sup> )14.8%	( <sup>18.12.</sup> )17.5%	22.0%
	지방	과장급 (5급 이상)	9.9%	( <sup>17.12.</sup> )13.9%	( <sup>18.6.</sup> )14.6%	20.0%
공공 기관	임원		8.6%	( <sup>17.12.</sup> )11.8%	( <sup>18.6.</sup> )14.3%	20.0%
	관리자		11.5%	( <sup>17.12.</sup> )18.8%	( <sup>18.6.</sup> )21.6%	28.0%
교원	국립대 교수		13.7%	( <sup>17.12.</sup> )15.8%	( <sup>18.12.</sup> )16.5%	19.0%
	교장·교감		24.6%	( <sup>17.12.</sup> )40.6%	( <sup>18.3.</sup> )42.7%	45.0%
군인	간부		4.3%	( <sup>17.12.</sup> )5.5%	( <sup>18.6.</sup> )6.0%	8.8%
경찰	일반경찰		7.5%	( <sup>17.12.</sup> )10.9%	( <sup>18.6.</sup> )11.2%	15.0%
	해양경찰		6.2%	( <sup>17.12.</sup> )11.3%	( <sup>18.6.</sup> )11.7%	14.4%

### ■ 정부위원회(500여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37.8%(<sup>16.12.</sup>) → 40.2%(<sup>17.12.</sup>) → 40.7%(<sup>18.6.</sup>) / 전 기관 지속관리

#### ※ 정부위원회 비수도권 위원 비율 40%로 단계적 확대(~'22)

\* 비수도권 위원비율: 27.2%(<sup>18.2.</sup>) → 32.9%(<sup>18.12.</sup>)

## 과제3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 ◆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포용적 행정 구현

###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역점

#### ■ 취약계층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
  - '중점개선 분야\*'를 선정하여 연내 사각지대 적극 해소
    - \* '19년 중점개선 분야 : 아동보호, 학교밖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

####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예시)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기관명)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카시트 보급 확산<국토부>	저소득층 중심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1,600대) 추진 / 어린이 카시트 택시보급 시범사업 추진
•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등
•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확대<교육부>	('18) 500대(시범운영) → ('19) 1,200대
• 시설 입소 미혼모·한부모 대상 시설 파견 아이돌보미 지원<여가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의 일·학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확대<복지부>	('18) 16개소 → ('19) 19개소
•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기준 준수)에 키즈카페 포함<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19)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해수부>	「선박구명설비기준(해수부고시)」 개정('19)
• 학교밖청소년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의무화 추진<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외부 활동 시

II. 추진 과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업(기관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청소년, 진로상담·학업지도 등 멘토링 사업(여가부)</li> </ul>	교육부 협업, 연수 중 현직교사 멘토링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복지부)</li> </ul>	('19) 25백명 → ('20) 4천명 → ('21) 9천명 → ('22) 17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복지부)</li> </ul>	('19) 4천명 → ('20) 10천명 → ('21) 15천명 → ('22) 22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기반 수도물 사용량 검침으로 독거노인 등 어르신 위기에방 시스템 도입(환경부)</li> </ul>	('19) 22개 지자체, 1천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우체국(247개)·지자체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시적 곤란상황 발굴·지원(과기정통부)</li> </ul>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맞춤형복지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무장애놀이터 시범사업 추진(행복청)</li> </ul>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동굴 내 무장애 시설(유니버설디자인) 시범(최초)설치 &lt;문화재청&gt;</li> </ul>	연구용역('19), 시설설치 시범공사('20), 시설 추가확대('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방통위)</li> </ul>	누적보급률: ('18) 69.7% → ('19)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경찰청)</li> </ul>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 지원 대상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시범 운행(국토부)</li> </ul>	7개 노선 시범사업('19.9~12, 1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교통취약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확대 &lt;농식품부&gt;</li> </ul>	수혜인원 : ('18) 150만명 → ('19) 250만명 / 예산 : ('18) 4,100백만원 → ('19) 28,744백만원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췌

## 3-2

## 현장중심 서비스 확대

###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 활성화 가이드」 수립·시행('18.7.23.)
  - (예시) 찾아가는 현장노동청, 찾아가는 거리 상담, 농진청 찾아가는 수출현장 기술지원 등
- 일선기관(세무서 등)의 민원환경·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확대

### ■ 현장민생공무원 총원 및 인력 효율화

- 국민안전·사회복지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총원 및 체계적 성과관리로 공공서비스 조기 개선을 촉진하여 국민체감도 향상
- 신규 총원에 앞서 부처 자체적인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의무화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업무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외부위탁 등 효율화 가능분야를 발굴하여 인력수요 대체효과 진단

### 〈 현장중심 서비스(예시) 〉

#### 현장중심 서비스(기관명)

-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 운영(교육부)
- 공공임대 아파트에 '이동우체국 작은 대학' 운영 활성화(과기정통부)
- 원거리 지역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영사·행정·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외교부)
- 행정접근성이 낮은 국민에게 이동식 버스(찾아가는 로파크)로 다양한 법교육 혜택 제공(법무부)
- 취약계층에 대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홍닥터) 제공(법무부)
- 도서·벽지, 소외지역 학교 등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 운영(문체부)
-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농식품부)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국토부)

현장중심 서비스(기관명)

- 산업단지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지원<고용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환경부>
-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활동 확대<여가부·경찰청>
- 낙도지역에 찾아가는 의로서비스 제공<해수부>
-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해수부>
- 찾아가는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확대<중기부>
-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보훈처>
- 찾아가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확대<관세청>
- 찾아가는 입대 前 병역진로설계<병무청>
- 찾아가는 수출상담 'DAPA-GO' 실시<방사청>
- 민-관 합동, 찾아가는 도서 민원서비스<해경청>
- 아동·장애인 대상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소방청>
-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마을주민 재난예방교육<문화재청>
-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안심영농서비스<농진청>
- 찾아가는 생활방사선 측정 서비스<원안위>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체



## 전략 2.

—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 과제4 :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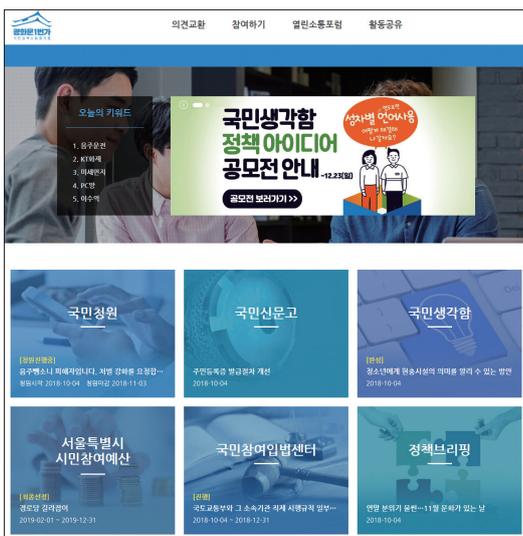
◆ 정책 제안, 민원 수준의 참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참여방식을 개편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

### 4-1 핵심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 ‘광화문1번가’를 범정부 국민참여플랫폼으로 발전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확대
  - 열린소통포럼 전 과정\*의 온라인 개방 및 오프라인 연계
    - \* 기획(국민 참여 사이트별 주요 관심사 분석, 온라인투표 등) - 운영(포럼 생중계 및 온·오프라인 토론) - 모니터링(제안의 정책반영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열린소통포럼 추가 개소(세종시) 및 지역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열린소통포럼’ 확대(2회→분기별)
-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운영
  -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는 국민 참여 사이트를 통합안내
  - 주요 참여 사이트\*를 연계하고 국민 의견을 빅데이터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책토론 활성화 지원
    - \*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입법예고 등

#### 〈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온라인 광화문 1번가) 〉



정책이슈 및 온라인상 국민관심사 분석·제공



다양한 국민참여 사이트 안내 및 바로가기

## ■ 국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국민의 공청회 청구권 신설 및 중립성·객관성 보장(「행정절차법」 개정)
  - ※ (현재) 공청회 개최권한을 행정기관에 일임 → (향후) 50인 이상의 사람 또는 법인 등의 요청에 따라 개최 가능
- 온라인 공개 청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원법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청원법」 개정 추진)
- 정책 이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표준화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작성대상 확대(필수대상 → 주요정책) 및 주기적 점검·관리

## ■ 예산 과정에 참여 강화

- 국민참여예산제 참여 확대
  - 다수 국민이 방문하는 ‘정부24’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 확대
  - 신규사업 외 기존사업 및 재정제도 개선까지 참여 대상사업 확대
- 주민참여예산 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 역량 강화
  - 자치단체 투자심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의무화
  - 자치단체 사업유형·참여형태 등에 따른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 국민참여형 조직진단 본격 실시

- 정부 내 조직·인력,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국민과 함께 현장 진단하는 참여형 조직관리 방식 본격 도입
  - ※ 진단결과는 부처 인력배치 및 제도개선, 소요정원 검토 등에 활용
- 현장방문 가능(법무부, 고용부 등 18개 부처), 대규모 증원 예정분야(해양경찰) 등 국민체감 분야를 선정하여 현장인력의 적정성 검토

## ■ 국민참여 법령심사 확대

-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집행 현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제시(‘18년 90건 → ‘19년 100건이상)

**4-2**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역점**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주민제안형 생활 SOC 추진
  - \*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자치법」개정) 타 주민조직과의 연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확산
- 주민이 발굴한 지역사회 문제를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혁신포럼\* 확산
  - \* (문제발굴) 지역별 의제수렴 및 문제해결팀 선정 → (해결방안 논의) 시민·지자체(행정지원)·공기업 (재능기부) → 우수사례 전국 확산
- 각 부처 예산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 \* 생활SOC, 도시재생(국토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 **주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활성화**

-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
  - \* (예시) 시민들이 폐현수막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 '똑똑세종 실험실'(세종시), 주민들의 생활 속 사회문제 제안·해결활동을 지원하는 '국민해결 프로젝트'(행안부) 등
- 기관별·분야별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 ※ 주민참여 리빙랩 확산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사회문제 해결 R&D 추진 리빙랩 안내서(과기정통부) 등
-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사회혁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추진
  - ※ 지방공기업 여유금의 운용수수료 활용 등(「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의원발의('18.5))

### 〈 국민참여(예시) 〉

정책단계	국민참여(기관명)
정책제안 국민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운영&lt;과기정통부&gt;</li> <li>• ‘국민외교센터’ 운영&lt;외교부&gt;</li> <li>• ‘온라인 광화문 1번가’ 구축·운영&lt;행안부&gt;</li> <li>• 국방 인권 모니터단 모집·운영&lt;국방부&gt;</li> <li>• 주민주도 ‘농촌현장포럼’ 구성·운영&lt;농식품부&gt;</li> <li>• 고용노동혁신 국민 자문단 운영&lt;고용부&gt;</li> <li>• 청년참여플랫폼 출범&lt;여가부&gt;</li> <li>•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lt;국토부&gt;</li> <li>•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찾아가는 ‘팜투게더(Pharm. Together)’&lt;식약처&gt;</li> <li>• 수입물품 안전 관리에 국민 참여 확대&lt;관세청&gt;</li> <li>• 청춘예찬 기자단 운영&lt;병무청&gt;</li> <li>•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방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lt;소방청&gt;</li> </ul>
정책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lt;기재부&gt;</li> <li>• 리빙랩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lt;산업부&gt;</li> <li>•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lt;고용부&gt;</li> <li>• 국민참여형 조직진단 본격화, 주민참여예산제 확산&lt;행안부&gt;</li> <li>• 성수기 해수욕장 백사장 쓰레기 해결을 위한 리빙랩&lt;해수부&gt;</li> <li>•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IoT 리빙랩 운영&lt;중기부&gt;</li> <li>•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실시&lt;법제처&gt;</li> <li>• ‘국민소통 협의체’ 주요이슈는 정책자문위 안건 상정&lt;해경청&gt;</li> <li>• 함께 만드는 새만금 타운홀 미팅 정례화&lt;새만금청&gt;</li> <li>• 출원제도 정책참여단 신설&lt;특허청&gt;</li> </ul>
정책집행·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동네 사회적 기업 발굴·확산&lt;고용부&gt;</li> <li>• 지역 양성평등센터 운영&lt;여가부&gt;</li> <li>• 주민참여형 도시재생&lt;국토부&gt;</li> <li>• 독립유공자 및 후손 대상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lt;보훈처&gt;</li> <li>• 공시생이 참여하는 국민소통·참여 플랫폼 ‘노량진 1번가’&lt;인사처&gt;</li> <li>•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화학물질 시장모니터링&lt;환경부&gt;</li> <li>• 사이버 치안 확대 실현을 위한 누리캅스 운영 활성화&lt;경찰청&gt;</li> <li>• 국민이 믿고 맡기는 문화유산 지킴이&lt;문화재청&gt;</li> <li>• 「바른세금 지킴이」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강화&lt;국세청&gt;</li> </ul>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서비스 국민 평가단 운영&lt;국토부&gt;</li> <li>• 주요 질병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발굴·평가·확산하는 ‘국민소통단’&lt;복지부&gt;</li> <li>• 청렴정책 국민 모니터단 정례화&lt;권익위&gt;</li> <li>• 신제품 개발 및 보급에 국민 참여 확대&lt;농진청&gt;</li> <li>• 산림정책 국민멘토단&lt;산림청&gt;</li> <li>• 명예 해양경찰 전문가 그룹 운영&lt;해경청&gt;</li> </ul>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췌

## 과제5 :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 ◆ 공공시설 국가독점, 공급자 관점의 양적 공개 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데이터 대폭 개방

### 5-1

###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역점

#### ■ 예산집행의 중점 정보 공개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의 '중점 공개분야'\*를 선정, 상세 공개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  
\* 장·차관에서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항공·숙박 등 여비 집행 내역별 해외출장경비 상세 공개 등
- 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정보를 한 곳에 정리 및 제시  
\*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내역,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 국민관심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편성·집행내역, 사업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기 쉽게 공개 추진(시범운영)  
\* (예시) 각 부처에 혼재된 '미세먼지' 관련 예산 집행 및 사업진행 상황을 국민이 알기 쉬운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

#### ■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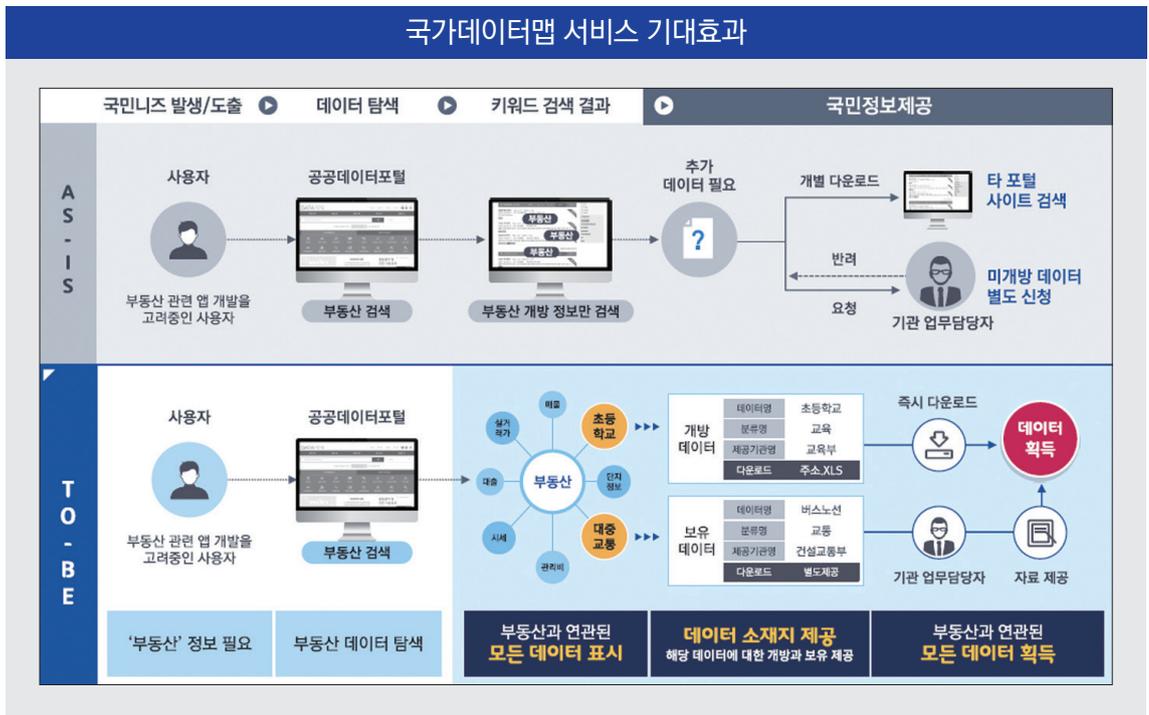
- 중앙정부 일별 예산집행실적 공개를 dBrain 미사용기관\*까지 확대  
\* 국방부, 방사청, 한강수계기금 등 자체 재정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회계·기금(15개)
- 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등 주민 관심 항목을 알기 쉽게 공개하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전국 확산('18년 10개 → '19년 전 자치단체)

#### ■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강화

-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하고(연 1회 접수 → 2회 이상 접수), 국정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
- 모든 문서\*에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종결재자까지 실명 공개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목록공개되는 모든 문서의 담당자-최종결재자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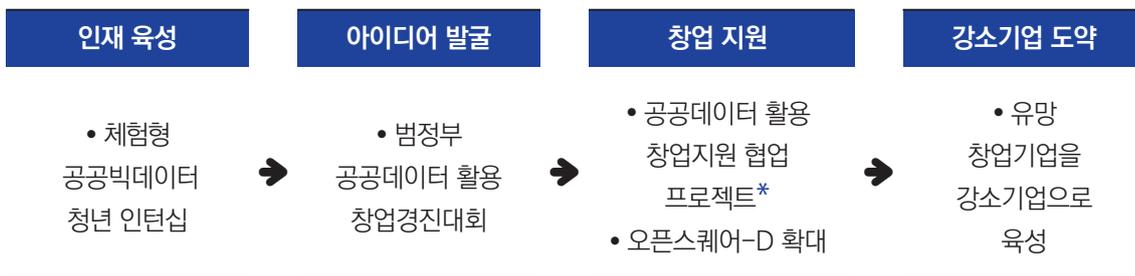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추진
    -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8) 28천개 → (~'21) 19만여개(보유데이터 45만건의 43%)
  - 국민수요 및 민간 활용성이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18) 77개 → ('19) 93개 → ('20) 109개 → ('21) 125개
- 국민 누구나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공개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구축·공개
  -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분석·활용까지 데이터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 표준화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대



●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용어\*·형식\*\* 표준화 방안 마련
  - \* (예시) 도로명, 도로명주소, 새주소, 신주소 등 → ‘도로명주소’로 표준 용어 정의
  - \*\* (예시) 길이(km, 자리수), 위치(위·경도 좌표값), 날짜(YYYYMMDD), 시간(시:분:초)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시행
  - ※ ('18) 중앙부처 → ('19) 지자체 → ('20~) 공공기관

● 기업 성장단계별 육성·지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 공공·민간기관(13개)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창업을 단계별로 지원(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대상 저작권 보호, 보증, 해외진출 등)

■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네거티브\* 원칙을 마련하고, 이용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지자체까지 확대
  - \* 국가안보·수사·재판·민감정보 관련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 5-3

## 공공시설 개방 확대

### ■ 공유서비스 플랫폼 구축

- 공공시설·자원 개방 참여기관을 지자체 중심에서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중앙부처·공공기관·학교 등)하고, 개방 대상자원 확대\*
  - \* ('18) 회의실·강당 등 시설 위주의 15,000여개 자원 개방 → ('19) IT기기·연구장비 등의 물품을 추가하고, 개방자원을 20,000여개까지 확대
-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자원을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예약·결제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개통
  - ※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존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공유자원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지역 유휴시설을 주민 활용공간으로 조성

- 미활용 문화재(고택·근대건축유산 등)를 연차적 매입·정비하여 마을회관, 도서관 등 지역공동체 공공시설로 활용
  - ※ (~'18) 3건 → ('19) 2건 → (~'22) 20건 매입·정비 및 활용
- 지자체의 유휴·저활용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참여공간으로 조성(17개 시도 86.7억원)
  - ※ (사례) 사유지 내 빈 가건물을 리모델링, '도시민청년리빙랩'으로 조성(경기 시흥시)
- 농협 양곡창고 등 농촌지역의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촌희망자 등의 창업공간으로 제공('19년 20곳)

### ■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익시설 공급

- 도심 노후청사를 「청사 + 수익시설 + 공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 \* 청년 및 대학생 임대주택, 청년 벤처·창업공간, 예술창작공간 등
  - ※ (설계·발주) 영등포·남양주·광주동구 복합청사, (사업승인) 舊 부산 남부경찰서 등 4건

## 과제6 :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 ◆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제도 및 협업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

### 6-1

### 범정부 협업 촉진

역점

#### ■ 부처 내/부처 간 정책조정 강화

-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집중관리  
※ 주기적 업데이트 및 점검, 협업 장애요인 해소 등 필요조치 적기 시행
- 부처 내 협업과제 선정 및 추진 적절성 등 상호점검 체계\*운영, 부처 간 이견은 주관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 대응  
\* 차관(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주요 국과장 + 대변인 등 참석
- △현안조정회의 △총리-부총리 협의체 △고위당정협의회 △관계장·차관회의 등 정책조정회의체를 통한 정책현안 논의 및 조율
- 정책홍보전략회의, 리스크대응팀을 통해 주요 정책의 발표내용, 시기 등을 사전 점검·조율하는 등 범정부 홍보협력을 통한 정책혼선 방지

#### ■ 협업 수준진단 및 유인 강화

- 범정부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협업 네트워크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하고, 협업 표준 프로세스 마련  
\* 국정과제 중 협조부처가 있는 협업과제(182개 실천과제) 가운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과제 선정(단순 협조과제 제외)
- 협업 조력기관도 동등하게 우대하여 타 기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유인 제공

#### ■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 본격 운영(18개 협업분야, 24개 부처, 40명)  
※ (예시)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 중기부(기술창업과) 간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생 창업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주요 국정 현안 추진을 위해 전문성, 부처 간 갈등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고위공무원단 전략 교류’ 실시

※ (‘18) 20개 직위 교류 중(12개 신규 발굴) → (∼’22) 고위공무원단 직위 10% 교류 예정

## ■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 각종 신청·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관 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확대
  - ※ (행안부, 대법원) ‘제증명\* 신청’ 시,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 후 제증명 발급(\*기본증명서 등 49종)
  - ※ (경찰청, 공단) 교통사고에 따른 연금·보험금 신청 시 필요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국민·공무원연금공단 등과 전산망 연계
  - ※ (과기정통부) 범부처(18개 부·처·청)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부처별 규정·절차·서식 표준화 및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공유·활용 확대, 연구자 중심의 정부연구개발 지원

## 6-2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 ■ 관할 구분 없는 협업 확산

- 기관 간 관할 구분을 넘어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확산

#### 협업모델 유형별 예시

##### 유형 1 : 지자체 관할 구분 없는 시설공유 공공서비스 제공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 천안시와 아산시가 도서관 및 방범·교통정보시스템(도시통합운영센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관할 구분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유형 2 : 단일 지자체 내 협업으로 관련분야 통합서비스 제공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 성북구 내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시설(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성북교육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들의 통합 공간 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유형 3 : 지자체와 중앙정부 협업으로 관련분야 통합서비스 제공

- 화성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 국세청과 협력하여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세)로 분리된 민원업무 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 보유한 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적시대응 제고
  - ※ (소방청)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의 헬기 이송을 기존 닥터헬기(지자체 및 병원), 소방헬기(소방청), 해경헬기(해양경찰청)로 각각 요청하던 것을 ‘119’로 단일화하여 적합한 이송수단 연계 및 중복출동 방지

### ■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확산

- 다수기관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지원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 현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는 고충민원 등 일부 상담 기능 수행 중

구분	(현행)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개선) 정부합동민원센터
주요 기능	고충민원, 일반민원, 복합민원을 각 기관에서 개별 상담	고충민원, 일반민원,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
	개별부처 중심 민원상담으로 복합민원 조정기능 부재	다부처 관련 복합민원 조정협의체운동을 통한 복합민원 조정
	다부처 관련 온라인 상담창구 부재 (국민신문고 개별상담)	국민신문고에 다부처 관련 온라인상담창구 개설
	고충민원 중심 원격화상 상담 ※ 민원인(서울사무소) ↔ 권익위	일반민원 원격화상 상담 확대 ※ 민원인(합동민원센터) ↔ 권익위·각 부처

- 시군구 인허가민원 원스톱민원창구 지속 확대

※ ('17) 70% → ('18) 80% → ('19) 85% → ('20) 90% → ('21) 95% → ('22) 100% 완료

- 경찰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찰 통합민원실’ 설치(36개)

※ 민원종류 확대(21종→40종), 수사·인권상담센터와 종합조회처리실을 기존 경찰 민원실에 이관하여 처리



## 전략 3.

—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 과제7 :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 채용비리, 부정부패, 성폭력 등 공직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단을 없애고,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7-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 ■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 공공부문 갑질,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 근절
  -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각 기관에 확산
  - 신고자 보호를 위해 모바일 기반 익명 상담 플랫폼 마련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근절
  - 금품수수, 부정청탁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적용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별 행동강령에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추진

#### ■ 생활 속에 내재하는 불공정·부조리 관행 척결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정례화 및 취약기관\* 집중관리\*\*
  - \* ① 채용비리(수사의뢰, 징계사안) 연속 발생 기관, ② 비리연루자 제재 미온적 기관, ③ 제도개선 이행 미흡기관 등
  - \*\* 감독부처와 함께 채용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 실시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안전 분야 실태조사 및 안전부패 유형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일제 감사·감찰 추진
  - \* 행안부·산업부·고용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으로 구성
  - \*\* 사익추구형,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구조적 부패유발형

#### ■ 공공 분야 부패 척결을 민간 분야로 전격 확산

-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유발 요인 발굴 및 제도·법령 등 개선
  - \* (유아~청년기)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정규직 전환 등 / (성년기) 공동주택 관리 등
- 보조금, 민관유착 분야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 관행 개선
  - ※ (예시) 보조금 환수 강화를 위한 채권확보장치 마련,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등 개선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청렴사회협약’을 통한 국민참여 중심의 반부패정책 추진체계 안착

## 7-2

##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 퇴직
-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시 징계기준 마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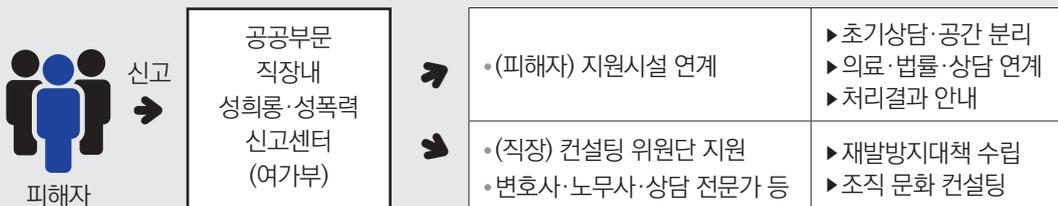
###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ombudsman'으로 배치·운영
-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 사건 발생기관 등에 파견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원
- 공공부문 자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구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교육자료 보급

### ■ 예방 교육 및 신고·상담 활성화

- 공공부문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 별도 구분 실시, 실적 허위보고 시 제재 강화,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등 예방 교육 내실화
- 공공기관장과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부과 추진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실화로, 접수사건 조치와 컨설팅을 통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처리 지원

### 공공부문 내 사건처리 지원



## 과제8 :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 국민들이 불편·불안해하는 것을 사전에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편의 증진

### 8-1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역점

#### ■ 선제적·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 활성화

-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부처별·지자체별 선제적 서비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표과제 (2~3개) 발굴·추진
  - 기관별로 각각 제공 중인 선제적 서비스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 등과 연계하여 종합 제공
- 수혜적 서비스 및 요금·세금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는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 ※ (예시)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푸시 알림 서비스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을 푸시 기능으로 안내
- 생애주기별 서비스 범위 확대 및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
  -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다수의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 발굴 및 단계적 추진 (예시,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등)

#### 〈 정부24 원스톱서비스 확대(예시) 〉

구분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6~18세)	청년 (19~34세)	중·장년 (35~64세)	어르신 (65세 이상)
서비스안내 (20개 분야 444종)	4개분야 31종	3개분야 61종	4개분야 89종	5개분야 206종	4개분야 57종
서비스 신청 (122종)	1종	2종	24종	90종	5종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든든임신	아이돌봄 꿈청소년	희망일터	내일창업	안심상속 당당노년

※ (‘18) 2단계(영유아-행복출산, 어르신-안심상속) → (‘19-) 5단계(영유아~어르신)

## ■ 범정부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수립
  - 공공서비스 단계별(기획, 집행, 평가) 표준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 ※ (예시)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개선 필요성, 예상 문제점 등 사전분석(기획단계), 불편·애로사항 의견수렴, 해소방안 마련(집행단계), 주기적 평가·분석 및 환류 등(평가단계)
- 기관별 대표 공공서비스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수립

### 〈 선제적·예방적 서비스(예시) 〉

유형	선제적·예방적 서비스(기관명)
사전알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한 軍 인사행정정보 알림서비스&lt;국방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로 분산 지원하는 군 입대 및 복무, 예비역 관련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모바일 앱(The Camp)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면허 갱신 등 대국민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lt;해경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 면허갱신 기간 도래, 안전교육 일정 전파 등 레저면허 자격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면허소지자에게 사전 안내</li> <li>※ 면허소지자 대상 사전 알림제 시행(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재해대응 사전문자 발송과 경영체 정보 공유 확대&lt;농식품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대응 사전문자 발송 서비스 확대로 병해충예방에 활용 확대</li> <li>※ 문자안내 : ('18) 3,870천 건 → ('19) 3,900천 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등록료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lt;특허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부재중에도 연차등록료 안내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li> <li>※ 모바일 안내서비스 신청 시 일정 포인트 지급 및 既 우편서비스 자동해지로 우편비용 절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 사전 안내&lt;복지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수급자의 77%가 복잡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li> <li>● 지자체·국민연금공단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안내문(MMS 등) 발송</li> </ul> </li> </ul>
생애주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lt;고용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노동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요양 초기부터 원직복귀계획 수립 → 재활 → 원직복귀 →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li> <li>※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시범실시 → 민간병원으로 확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lt;여가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능 강화</li> <li>※ 새일센터 15개소 → 31개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지원 전담창구 설치를 통한 소상공인 재창업 유도&lt;중기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 및 사후 관리를 지원</li> <li>● 폐업신고(행정·세무·금융 등), 사업정리(철거·원상복구) 등 원스톱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든든임신 원스톱서비스 도입&lt;행안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진단 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신청 서비스 제공</li> <li>※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50만원), 산모건강지원(엽산·철분제) 등</li> </ul> </li> </ul>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췌

## 8-2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 ■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혁신

- 블록체인, AI, IoT 등 첨단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하여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사회문제 해결 추진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활용 공공선도 시범사업 확대('18년 6개 → '19년 12개)  
 (행안부) 인공지능 기반 국민비서, 범정부 민원상담 365등 시범사업 추진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예)**

- (블록체인) 종이증명서 없는 부동산 거래(과기정통부·국토부)
- (인공지능) 인공지능(AI) 우범화물 검사 대상 선별시스템(관세청)
-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소외계층 공용차량 카셰어링 서비스 확산(경기도)

- 공공·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선도사업 추진
  - ※ (공공)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정부24, 국민건강보험 등 15개 기관 22개 사이트 대상
  - (민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83% 차지)의 액티브X 90% 이상 제거
  - \*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위해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액티브X,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실행파일이 있음

### ■ 종이 대신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 「정부24」 모바일 생활서비스 확대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모바일 출력·납부\* 확대, 지자체 서비스\*\* 연계 등
    - \* (예) 이용률이 높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출력, 민원수수료 간편 결제 등
    - \*\* 지자체 공영자전거 대여서비스 연계, 전국 휴양림 예약서비스 통합제공 등
-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을 모바일 기반으로 발급·유통하여 기관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토록 추진
  - ※ ('19) 주민등록등초본 시범실시 → ('20~)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계적 확대
- 모바일 공통기반 기능개선 및 이용 확산
  - 모바일 정부 홈페이지나 앱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안 인증체계, 속도, UI 개선

### 〈 첨단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사업(예시) 〉

유형	첨단기술 활용 서비스 혁신사업(기관명)
블록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반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 편의 제공&lt;외교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 업무 처리를 위한, 재외공관 공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에서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으로 해외직구 통관체계 혁신&lt;관세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여 통관 정보를 자동 취합정리</li> <li>● 구매자들은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정부는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세금탈루 방지,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lt;방사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대국민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li> <li>●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접수·조회 및 평가결과 관리시스템 구축</li> </ul> </li> </ul>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용어 및 맞춤법 검토 시스템 개발&lt;법제처&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용어 및 표현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법령 용어나 문장을 글자 단위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도구 및 법령 문장 패턴 검색 프로그램 개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챗봇을 활용한 청소년 상담&lt;여가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활용 챗봇을 통해 모바일 기반 청소년 상담서비스 제공(학교폭력, 근로 등) ※ ('18)2개 유형(학교폭력, 청소년 근로상담) → ('19)5개 유형(성자식, 학업진로, 일탈 및 비행 추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시스템 구축&lt;통계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자료의 검색에서부터 자료 분석에 이르는 데이터 활용 쏠 여정에 대해 혁신적인 이용자 지원 및 통계활용 역량 제고 ※ ① 초보 이용자 묻고답하기 채팅봇, ② 심층 분석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검색, ③ 이용자 공통의 다이내믹, FAQ의 3요소로 구축</li> </ul> </li> </ul>
사물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촘촘한 문화재 안전시스템 확대&lt;문화재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확대</li> <li>● 위치이탈, 침입 여부 등 문화재 현장의 실시간 상황에 대한 자동 감지체계 구축(센서, CCTV를 활용한 위치추적,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탑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 도시 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보급&lt;국토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 도시운영 통합플랫폼 보급을 확대('18년 12곳 → '19년 15곳)하고, IoT, 클라우드 등과 연계한 신규서비스 개발 및 시범적용 ※ (예시) 내비게이션 주차 안내, 탈북자 등 신변보호, 외국인 관광 안전도우미, 1인 점포 범죄예방, 독거노인 돌보미, 공공자전거 관리 등</li> </ul> </li> </ul>
뉴미디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체험서비스 확대&lt;문화재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체험·교육 공간 조성</li> <li>● 뉴미디어 기술(AR·VR, 프로젝션 매핑,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놀이·오락 형태의 무형유산 체험</li> </ul> </li> </ul>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취

## 과제9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 ◆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정부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개선

### 9-1

###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역점

#### ■ 행정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 정부내 각종 조사·진단·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기대응 및 예측능력 제고

#### 주요 사업(기관명)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소방안전 정책 지원<통계청·소방청>
  - 소방청 시도별 구조활동 데이터와 통계청 시도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구조 활동 통계생산 제공 및 분석 지원
  - ※ 지역별, 사고원인별, 발생장소별, 시간대별 등 다양한 구조활동 현황 분석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행안부>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 공개
- 산재예방 자료 DB화 및 근로환경조사 결과정보 공유·개방<고용부>
  -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획득한 조사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 공개
-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적용<법무부>
  -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수법, 이동패턴, 생활환경 등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의 자동 추출 및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실시간 피부착자의 위험수준(상, 중, 하) 변화와 내용을 전담직원에게 상시 제공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국토부>
  - 국민생활안전 SOC의 지하안전사고 방지와 지하의 개발·이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을 통합하여 3D지도(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해수부>
  -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구역별로 재난 통계정보를 생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빅데이터 기반과 연계하여 융합정보 생산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9.1.)에서 발체



## 9-2

##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 ■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환경 조성

- 기관 간·기관 내 영상회의 활성화로 불필요한 출장 및 비생산적 회의 문화 개선
  - 정부청사·각 부처별 영상회의실 확대 및 영상회의 장비(이동식 장비 등) 확충
  - 공공기관 간 영상회의실 연계 확대\* 및 민간부문에 대한 개방\*\* 추진
    - \* 목표연계율 : ('18) 30% → ('19) 50% → ('20) 70%
    - \*\* 지방공기업평가원 대상 시범 추진 후 점진적 확대
- 모바일 결재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 세종-서울, 국회 출장 시 언제·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모바일 전자결재 및 정부원격근무서비스 (GVPN)\* 사용 확대
    - \* PC, 노트북으로 재택 등 원격 업무처리 가능
  - 보안용 업무메신저 '바로톡' 이용 활성화\* 추진
    - \* 지문, 홍채, 안면인식 기능 등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 ICT 기술 활용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지능형 오피스 시범구현으로 근무 환경 혁신
  - 실시간 협업하여 문서 작성이 가능한 '웹오피스' 시범도입
  - 외부에서 자료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용 G드라이브 확대 구축
  - 모바일 문서작성 및 검토가 가능한 행정전용 휴대용 단말기 시범도입
- 드론·챗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확산
  - ※ 드론 영상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예방활동 및 산불 진화 대응력 강화(산림청),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민간협력 드론긴급운용팀 구축 및 시범운영(행안부)

### ■ 넓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 정책 실패 경험을 축적, 실패사례로부터 학습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
  - ※ 권역별 실패박람회(행안부),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중기부)
-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행정능력 향상
  - 공무원 공모 제안을 적극 시행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공모주제로 선정하여 적극 참여 유도
    - ※ (사례) 해양수산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선정 및 추진
  - 공무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무원 공모제안 운영
    - \* 신규/관리자 교육과정 공무원 대상 제안실시, 채택공무원에게 평가가점 부여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구현

: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 10위권 진입(~'22)

※ '17년 29위 (38개국 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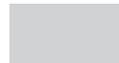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

: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22)

'17년 32위  
(35개국 중)

'18년 25위<sup>2)</sup>  
(34개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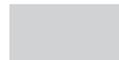


깨끗한 정부 구현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22)

'17년 51위  
(180개국 중)

'18년 45위<sup>3)</sup>  
(180개국 중)



1) OECD Better Life Index, 2017(38개국 대상)

2) World Gallup Poll, OECD 및 KDI(Lim, Wonhyuk·Wang, Shun), 2018(34개국 대상)

3)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180개국 대상)

## ■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p>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복잡한 민원창구</p>	<p>»</p>	 <p><b>한 곳 방문으로 해결하는 서비스 확대</b></p> <p>※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7월), 시군구 원스톱 민원창구 확대(185개, 전체 80%)</p>
<p>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몰라 불이익을 겪기도 함</p>	<p>»</p>	 <p><b>언제 어디서나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서비스 확대</b></p> <p>※ 기초연금 미수급자 신청안내 확대,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등</p>
<p>구비서류를 인쇄해서 행정기관에 방문 제출</p>	<p>»</p>	 <p><b>등초본 등 주요 증명서를 모바일로 저장, 전송까지</b></p> <p>※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p>
<p>참여창구가 너무 많아서 헷갈림</p>	<p>»</p>	 <p><b>‘온라인 광화문 1번가’에서 참여창구를 찾고 손쉽게 참여</b></p> <p>※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분야별·지자체별 참여 사이트 등 연계</p>

## ■ 정부가 공개·개방하는 자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p>정부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알기 어려움</p>	<p>»</p>	 <p><b>부처 업무추진비, 지자체 복지 포인트 한 곳에서 비교 공개</b></p> <p>※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국민관심 예산집행 정보 선정·공개</p>
<p>공개된 데이터는 많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름</p>	<p>»</p>	 <p><b>누구나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공개</b></p> <p>※ 국가데이터맵 구축·공개('19년 중앙부처 → '20년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p>
<p>국민안전 관련 데이터가 산재되어있어 활용 곤란</p>	<p>»</p>	 <p><b>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 점검정보 DB화, 한 곳 공개</b></p> <p>※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20년)</p>
<p>이용가능한 공공시설을 일일이 알아보고 전화 신청</p>	<p>»</p>	 <p><b>2만여개 공공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예약·결제</b></p> <p>※ 공유자원 개방·관리시스템 구축</p>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추진방법 및 성과관리

# 1. 추진방법

## ■ 혁신과 업무의 유기적 연계

- (과제선정) 국민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기관 핵심정책·사업을 기관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발굴·선정 **“혁신 따로, 업무 따로 지양”**  
※ 장관급 기관 3-4건 / 차관급 기관 2건
- (목표설정) 구체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연내 달성  
\* 기존 대비 달라지는 점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수치화가 불가한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목표 적시
- (추진방식) 인사·조직·예산 적극 지원\*, 기관 내·외 협력 강화\*\*, 데이터 행정, 첨단 ICT 활용 등 정부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 적용  
\* 적극행정 장려, 문제해결형 조직운영 등  
\*\* 기관 내·외 협업방안 마련, 국민 참여 확대 등
- (관리활용) 정부혁신 브랜드과제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

##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협업 촉진

- 핵심과제 중 다부처 연계과제\*는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  
\*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기재부, 조달청,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등), 중점 예산 집행 정보공개(행안부, 인사처, 기재부 등) 등
- 주관기관 중심의 주기적 회의, 분기별 성과 점검, 협업 인센티브 부여 등

## ■ 정부혁신 성과의 체계적 홍보 추진

- 각 기관의 정부혁신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언론 보도,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오프라인 홍보 등 추진  
※ 단순 정책의 홍보가 아니라 정책의 성과를 정부혁신과 연계하여 홍보
- 국민이 생활 속 혁신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지도’ 제작·공개
- 정부혁신 핵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정부혁신 박람회, 실패박람회 등

---

## 2. 성과관리

### ■ 정부혁신 평가 실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중심으로 평가를 전환
- 올해 정부혁신 역점 추진과제 및 부처 핵심사업 중심으로 평가
- 지나치게 복잡한 평가지표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소화·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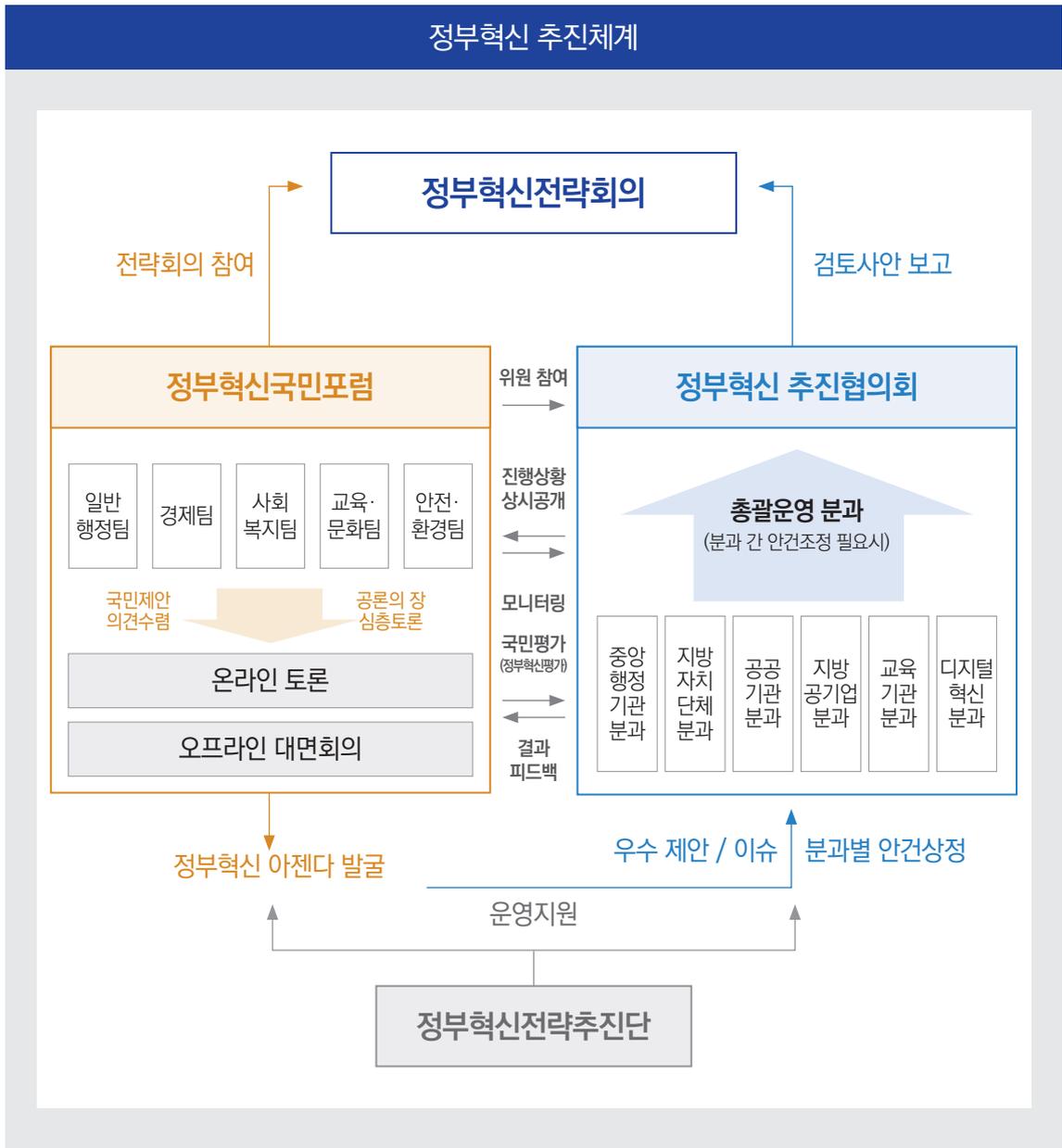
### ■ 지속적 변화관리 추진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분과별(중앙·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디지털혁신) 혁신추진실적 주기적 점검(분기별 1회)
- 중앙·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 각급기관이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벤치마킹을 촉진함으로써 혁신 가치 내재화
- 정부혁신 교육 실시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에 정부혁신 교육과정 개설, 권역·기관별 자체교육 지원, 표준교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처 및 시·도 공무원교육기관 등
  - 간부급 토론회·워크숍 등을 통해 정부혁신 비전 공유·확산
- 기관별 혁신역량 제고
  - 정부혁신 평가 미흡기관 및 신청기관 대상 정부혁신 컨설팅 지원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논의
- 정부혁신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 확대



추진체계

## 정부혁신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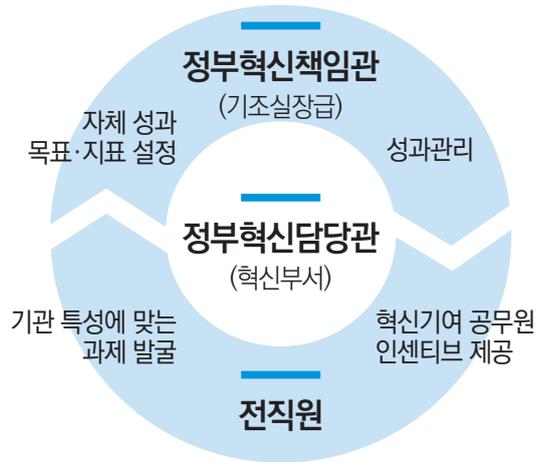
※ 정부혁신 주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국가·지방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

### ■ 국민참여 창구인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

-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의견수렴 창구로 온라인을 통한 상시 제안·토론 및 오프라인 토론회 활동 병행
-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화 논의

■ 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의 정부혁신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민관 합동·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 마련
- 공동위원장(행안부장관, 국민포럼 대표) 등 민관 위원(50여명) 구성, 분야별 분과위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 실적관리, 혁신계획·평가결과 심의 등 수행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동참 유도

■ 기관별로 자율적 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 기관별 정부혁신책임관(기조실장급) 및 혁신부서 지정·운영
  - ※ 43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정부혁신책임관 지정, 지자체 혁신담당부서 기능·인력 보강
- 기관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과제발굴, 성과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운영
  - ※ 기관별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해커톤 개최, 싱크탱크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 등

■ 정부혁신책임관회의

- 기관별 핵심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점검,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 붙임 1 : 2019년 정부혁신 세부사업 및 주관 부처

과제번호	과제 및 세부 사업	주관부처
<b>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b>		
<b>1</b>	<b>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b>	
1-1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기재부
	① 일자리, 안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분야 예산 대폭 확대	
	②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운영	
	③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마련 및 도입	
	④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1-2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기재부·조달청·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시범구매 활성화	
	② 혁신성 평가지표 개발 및 혁신성 인증제도 도입	
	③ 거래활성화를 위한 경쟁적 대화방식 활성화 기반 마련	
	④ 쌍방향 오픈마켓 방식의 조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b>2</b>	<b>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운영체계 혁신</b>	
2-1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행안부(감사원)
	①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도입·확대	
	② 현장·민생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③ 전문직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정비	
	④ 일선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2-2	유연하고 유능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행안부
	①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 시범 운영(복수차관 부처 등)	
	② 생활현장 개선, 제도혁신 등 「벤처형 조직」 운영 확대	
2-3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여가부

과제번호	과제 및 세부 사업	주관부처
<b>3</b>	<b>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포용적 행정</b>	
3-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행안부·여가부 등
	① 취약계층 대상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적극 발굴	
	② 제도·정책·서비스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	
3-2	현장중심 서비스 확대	행안부
	① 정책수요자별 현장 방문서비스 확산	
	② 현장중심의 공무원 총원 및 인력운영 효율화	
<b>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b>		
<b>4</b>	<b>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b>	
4-1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행안부·기재부·법제처 등
	①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② 국민참여예산제 참여자 및 참여 대상사업 확대	
	③ 주민참여예산 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 역량 강화	
	④ 국민참여형 조직진단 본격 도입	
	⑤ 국민참여 법령심사 확대	
4-2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행안부·과기정통부
	① 주민자치회 제도화	
	② '지역혁신포럼' 확산	
	③ 주민주도 사회문제해결 활성화(리빙랩 등)	
	④ '지역활성화지원기금' 설치 추진	
<b>5</b>	<b>정보와 데이터, 공공시설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b>	
5-1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행안부·기재부
	① 예산집행정보 공개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 예)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② 기관별·분야별 정보를 한 곳에 게시 예) 복지포인트 등	
	③ 국민관심 주요사업의 예산·진행상황 등을 알기 쉽게 공개 예) 미세먼지 등	
	④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전 자치단체 확산 시행	
	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활성화 및 최종결재자까지 실명 공개	

과제번호	과제 및 세부 사업	주관부처
5-2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행안부
	①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추진	
	② 「국가데이터 맵」 구축	
	③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④ 민간 클라우드 이용기관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까지 확대	
5-3	공공시설 개방 확대	행안부· 기재부·국토부
	① 공공시설·자원 개방 기관 및 대상 확대	
	② 공공시설·자원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③ 도심 노후 청사를 「청사+수익시설+공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	
<b>6</b>	<b>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b>	
6-1	범정부 협업 촉진	국조실·행안부· 인사처
	① 협업 네트워크 진단 및 표준 프로세스 마련	
	② 부처 내외 협업 조정 강화	
	③ 협업정원제 본격 운영	
	④ 고위공무원단 전략 교류 실시	
6-2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행안부·권익위
	①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확산	
	②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③ 시군구 인허가민원 원스톱민원창구 지속 확대	
<b>전략3.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b>		
<b>7</b>	<b>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b>	
7-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권익위·행안부
	①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근절 등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정례화	
	③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및 운영	
7-2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여가부

과제번호	과제 및 세부 사업	주관부처
<b>8</b>	<b>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b>	
8-1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행안부
	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② 수혜적 서비스 및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③ '범정부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수립	
8-2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행안부·과기정통부
	① 블록체인 활용 공공선도 시범사업 확대	
	②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촉진사업 추진	
	③ 공공·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추진	
	④ 「정부24」 모바일 생활서비스 확대	
	⑤ 모바일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추진	
<b>9</b>	<b>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구현</b>	
9-1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행안부·권익위
	① 정부 내 각종 조사·연구 등 지식 데이터베이스화	
	② 범정부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치 추진	
	③ 국책연구기관 간 협업,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지원	
	④ 국민안전, 참여·소통기제 등 빅데이터 분석	
	⑤ 민원 빅데이터 분석 강화	
9-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행안부
	① 세종-서울 등 원거리 간 영상회의 활성화	
	② 모바일 결재 및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사용 확대	
	③ 드론, 챗봇 등 첨단기술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확산	
	④ 정책 실패경험 축적 및 학습 지원	

※ 각 과제별 주관부처는 해당과제가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제관리 등을 지원·추진  
 ※ 각 과제별 주관부처 외의 기관은 과제 내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상기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목록은 정부혁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

## 붙임 2 : 지방자치단체 '19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혁신 실행계획('19.2.)에서 발췌)

# 전략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1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 ■ 현장감수성·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 양성

- 공무원의 현장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확대
  - (세종) 복합·특수재난 대비 체험위주 교육 실시 및 전문요원 양성
  - (부산 동구)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
  - (대전 서구) 신규 직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새내기 새출발 워크숍」 운영
- 현장·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세종)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전직원 게이트키퍼 양성
  - (광주 서구) 직원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악성민원 대처 매뉴얼 수립
    - \* 외부병원과 연계 상담·치료 지원, 민원접점 공무원 힐링 연수 확대(2회)
- ICT 첨단 기술을 활용, 현장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
  - (서울 구로) 주차단속시 PDA 활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 양성

- (전남 목포) 고수공무원 선발 콘테스트 개최(6명 선발)
- (세종)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면·동지역 확대 시행
- (대전) 18개 현안사업에 대해 '도전팀장 공모제' 시행, 성과평가 통해 성과상여 최고등급 부여 및 발탁승진 등 인센티브 제공

### ■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 (울산, 광주, 부산 등)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대구 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담창구 운영·개선사례 전파
- (부산 강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대구) 전국 최초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 대상 주간보호, 인재재활프로그램 등 지원
- (충북 괴산) 기쁘드림 빨래터 세탁서비스, (대구 중구) 이불빨래 「해결해 dream」  
※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 침구류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
- (강원) 고위험군 산모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 대학병원 연계 응급진료 체계 구축, 산모안심택시, 안심스테이 등 제공
- (울산,광주,충북,부산 등) 학교밖청소년 공공서비스 제공  
※ 학교 재학생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 문화 혜택, 진로 상담, 일자리 등 서비스 제공
- (부산) 사회관계 취약노인 대상 「시니어 해피라이트」 추진  
※ 건강수진에 맞는 맨손·기구 체조, 산책과 명상 등 생활운동 제공
- (인천 서구) 문화교육, 멘토링, 일자리, 심리치료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 ■ 선제적 서비스 제공

- 최신 ICT를 활용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 (대구)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행정서비스 민원분석·예보시스템 구축
  - (울산 울주) 보고 듣는 민원편람 서비스 운영  
※ 정보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해 큰 글자 민원편람, 오디오북, 스마트폰을 활용 책 읽어주는 서비스 제공 등
  - (부산 동래)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서비스 운영
  - (인천) 독거노인 대상 지능형 안심폰 보급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부서비스
  - (대전)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종합 관리체계 구축
- 주민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대구 동구) 맞춤형 혼인(구청)·전입(동복지센터)신고 원스톱 서비스
  - (강원 태백) 법률홍닥터 제도 활용 찾아가는 법률교육
  - (제주,부산 등)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
  - (강원 삼척) 찾아가는 복지 콜(Call) 사무소 운영

## 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 3

###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혁신 분위기 확산
  - (대구) 제2회 대구지역혁신포럼 개최 ('19.7월 예정)
  - (강원)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강원혁신포럼' 활성화
  - (부산 남구) 주민참여 '1일 명예과장제', '명예감사관' 운영
  - (전남 목포) 온라인 '시민 청원제', (부산 연제) 온라인 구민청원 '이구동성'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인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도입
  - (광주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운영
  - (대구 수성) 주민주도 행복마을 및 마을계획단 운영
    - ※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축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 (제주)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지원

#### ■ 주민주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활성화

- 지역 사회문제 소통협력 플랫폼 구축
  - (충남) 지역문제 발굴 온라인플랫폼 '달뼌' 구축,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 (제주)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더함' 구축
  - (강원 춘천) 춘천 사회혁신파크 조성
-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
  - (서울 중구) 주민이 제안하고 NGO가 지원하는, 빈집 활용 '약수 보금자리' 사업 확대
    - ※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기초수급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 (세종) 시민참여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마을조성,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 (경기 시흥) 소소한 일상 속 혁신을 만드는 도시민 청년 리빙랩 조성
  - (부산) BRT 추진에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추진
  - (부산 북구) 주민이 직접 그리고 가꾸는 '구남마을' 조성 등

## 4

## 범정부 협업 촉진

### ■ 행정관할을 넘어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 (세종) 인근 지자체 연계 협력을 통한 관광 콘텐츠 개발·확대  
※ 지역 연계 시티투어, 관광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추진 등
- (제주) 교통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도청·경찰·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등 추진
- (대전) 대청호 조류대응 협업체계(8개기관) 구축 활성화  
※ 한국수자원공사, 인근 지자체(옥천, 보은, 영동, 금산), 대전시 등
- (충북) 2개 지역 이상이 함께 활용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괴산·증평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경남)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 운영  
※ 행정, 산업, 경제, 환경, 문화, 관광, 체육 등 포괄적 협력체계 마련

### ■ 기관 간 나누어진 시스템 통합 및 정보공유

- (강원)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 강원도 및 시군, 경찰청,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간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 (인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인천 업무정책 포털 구축  
※ 인천-경남 공동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개발

### ■ 기관 내 협업 촉진

- (충남 서천) 정책 해법찾기!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협업과제 선정·운영
- (울산 중구)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지식·협업의 날' 운영
- (광주) 협업이 필요한 기관(부서)과 상호 인력 파견, 협업 정원제 도입
- (경남) 협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시스템 구축
- (인천) '협업의 달인' 제도 운영, 매월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제주) 열린혁신 등 협업 기여자 인센티브(해외연수, 표창, 성과금 등) 제공 확대

## 전략3.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 5

###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 ■ 국민안전 데이터 집중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 도로 및 시설물 DB구축으로 주민안전 확보
  - (울산 울주) 지하 하수관DB구축으로 도로굴착 시 파손사고 방지
  - (경기 성남) 드론·데이터열화상카메라 활용한 열수송관 안전점검
  - (전북 임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추진(~'21.)
- IoT·데이터 활용 효율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경기)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중심으로 IoT에 의한 화재감지 → 경보 → 119자동신고 → 소방출동까지 onestop 화재신고시스템 확대
  - (울산 울주) 방사능유출 등 재난 시 사용자 필요정보 (보호소 위치 등) 제공 및 도로 공간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최적대피경로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세종)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이행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 ■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 각종 입지분석에 데이터 활용
  - (대구) 데이터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태양광 발전 입지 분석
- 빅데이터를 통해 기상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정책 개선 추진
  - (부산) 기상자료(강수량 등)·대중교통·유동인구 융합분석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른 대중교통 탑승인원 분석 및 중점구간 관리 등 대중교통정책 개선에 활용

#### ■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 기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 (경남 창원) 동 단위로 주요사업·시정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도 '주민자치 소통맵' 구축사업 추진
- (제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민원접수, 일간지, 소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사회이슈에 대한 시민의견 조기인지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 합동